광주시 1109억 투입 18만 소상공인 자생력 키운다

다음달부터 1400억 특례보증 융자 지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
영세업체 인건비·임대료 지원…상생카드 발행해 소비 촉진 사업도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증대를 통한 소비촉진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109억여원을 투입, 18만여개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수는 18만여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하면 25만명에 이른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1109억여원을 들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내수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등 3대 방향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이 핵심이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대출규모는 총 1400억원이다.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40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광주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47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2500만~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한다.

특히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기본 이자 지원율(3%)에 1%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협약은행은 대출 지원을, 광주시는 3~4% 이자 지원을 맡는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4개월간 월 50만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낸 사업인 만큼, 올해는 대상규모를 25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80%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광주시는 또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 중이다. 추경 예산을 확보해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30억원을 들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만여명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 늘린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시 자체 예산으로 상생카드 발행을 이어간다. 시 예산은 지난해 2022년 642억원에서 올해 696억원을 투입한다. 체크·선불카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7%를, 설·추석(1·9월) 한시적으로 10% 할인 받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생카드 결제수수료(0.25~0.85%)도 전액 지원받는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사업 부진과 생활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지속 발행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특례보증,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등을 확대해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전남·울산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울산시 "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김영록 지사·김두겸 시장 공동 성명…국세 지역 환원 촉구 등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재해, 대기오염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전남도가 울산시와 손을 잡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유화학산업단지에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실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김회재·이채익 국회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화재 및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남도와 울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에 해당하는 12조4216억원이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관리와 환경 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두 시·도는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두겸 시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미래차 대전환 전방위 지원

市·혁신기관·부품업체, 사업 설명회…지원책·사업 등 소개

광주시와 지역혁신기관, 자동차부품업체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시는 22일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자동차 기업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미래차 대전환 기업지원 전략과 기관별 자동차 기업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청,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전기차·자율주행차·목적기반차(PBV) 등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업지원 내용 소개, 참여방법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사업이 추진돼 기업이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미래차 국가산단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 지역 부품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시는 혁신기관과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배포해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책자 내용은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신걸 광주시 기반산업과장은 "8개 기관에서 설명한 기업지원 사업은 지역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이 미래차 시장으로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차 부품기업의 품질, 기술력 강화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자리·소통·삶…광주 청년 정책 제안

청년위원회 출범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8기 광주시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제8기 청년위원회는 올해 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광주시 거주 만19~39세 청년 50명으로 구성됐다.

청년위원은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소통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주제에 맞게 청년들의 고민을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2016년부터 교류 중인 대구청년네트워크를 비롯한 다른 지역 청년단체들과 정책교류를 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제7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18건의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기본조례 제정, 취업준비생 정장대여 사업, 구직청년 교통비 지급,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등 25건이 시정에 반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